# 文, 장관들 긴급 소집…日 수출규제 점검

## 李총리·홍남기 등 참석···한일 외교회담 결과 보고 日 '화이트리스트서 韓 배제' 대응 시나리오 마련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청와 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 회의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 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 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 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 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 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 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 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받고서 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를 두고 양자회담을 한 만큼 문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의 입 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장관들은 일본 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 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 비해 단계적 대응 시나리오를 잠정적으 로 마련해둔 상태다.

우선 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기와 형식은 2일 각의 결정 직후 곧바로 발표하는 방안, 또는 5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내거나 대 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 장관 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대일 메시지를 내고 대응책을 발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 합

오는 4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 서도 이와 관련한 고강도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단기적 대응책과 동시에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한 방안 등 중장기 대책을 함께 고민 중 이다. 특히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방안도 다양하게 살펴보며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살펴보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한 상황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외교부 "오늘 화이트리스트서 韓 배제할 것"

외교부 1차관 외통위 출석…"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추진"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 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 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차관 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 석해 이같이 밝힌 뒤 '일본 각의 결정은 몇시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오전 10 시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또 "미국이 '중재'라는 단어 는 쓰지 않지만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 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 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 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이 한일 간 간극만 확인한 채 무위 로 끝난 데 대해서는 "2일 (화이트리스 트 배제) 결정 전 마지막 기회까지 노력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회담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며 "미국의 설득 노력에도 일본이 완고하고 강경해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 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함께 만날 가능성 에 대해서는 "내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는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피해 품목에 대해 "내일 산업통상자원 부가 발표하겠지만, 1천200개보다는 적 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부 중심으 로 내일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을 분리 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범정부 입장을 설명 해 드릴 수순이 있다"라며 "일본의 결정 이 있고 나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文, 개각 막판 고심…교체 폭 줄어들까

#### '검증 난관'…과기장관 등 유임설

이달 단행되는 개각의 폭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후임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가 맞물리는 등 변수가 계속 떠오르고 있기때문이다. 개각 시기 역시 애초에는 5일 -6일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이보다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개각에서 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박능후 보건복지 부 장관의 경우 유임설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우 최근 발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여권 관 계자들의 전언이다.

여권의 한 중진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실장이 사실상 단수 후 보로 검증을 받았지만, 최근 다시 후보 군에서 멀어진 것으로 안다"고 기류를 전했다. 여기에 더해 교체 대상으로 꼽 혔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에 대해서도 유임설이 번지고 있다.

유 장관은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지 만, 이런 의사와 관계 없이 후임을 구하 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다. /연합뉴스

## 한일 외교수장 최종담판 '무위'…日, 끝내 파국으로 가나

### 韓, GSOMIA 카드 만지작…경제 이어 안보 문제까지 확대 우려

한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이 일본의 대 (對) 한국 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마 주 앉았지만, 기대했던 돌파구가 열리지 는 않았다.

일본이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전략 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 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 서, 하루 전에 이뤄진 마지막 담판에서 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 외한다면 한국도 모든 조치를 동원해 이 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관계는 '강대강'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갈등이 한 층 고착화·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상황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는 것은 일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태 국 방콕에서 열린 고노 다로 일본 외무 상과의 회담에서 백색국가 제외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일본은 꿈 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l을 문명히 수시시켰나"고 말했나.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 는 백색국가 제외 절차는 일단 보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휴 전' 제안이지만 일본은 외면했다.

고노 외무상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국제법과 같은 효력의 한일청구권협정 에 위배되니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한국 이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 관방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공언한 대로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 색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이런 상황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

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 다"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하면 이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중단을 검토할 것 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기자들과 만 난 자리에서 'GSOMIA 유지 관련 입장' 을 질문받자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 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것은 GSOMIA 중단 카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

석됐나. /연합뉴스

## '민주研보고서' 논란…野 "매국적 정국전략"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 원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총선 전략을 연계한 내용의 보고서를 당 소속 의원들 에게 배포한 데 대해 1일 야당이 십자포 화를 퍼부으면서 논란이 지속됐다.

자유한국당은 한일 갈등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 내용을 비판하며, 민주당이 국가적 위기를 총선 전략에 활용하고 야당을 '친일 프레임'에 가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 도 민주연구원 보고서 파문과 관련한 성 토가 주를 이뤘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에서 "기업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정권은 총선 표 계산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우리 당에 악착같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반일 감정을 선동해온 정권의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나라의 미래야 어떻게 되는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매국적 정국 전략"이라며 "국가의 주도 세력이 위기 극복에 힘쓰기보다 이를 정적을 죽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민주연구원이 아니라 민중 선동연구원인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친일 프레임에 집착했던 이유는 총선 승 리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규 정했다. /연합뉴스



